



# 연합노보



2015  
특보  
3.3 화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을곡로2길 25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오정훈 · 편집인 이을·김태균

## 차기 사장의 조건은 '경영 · 소통능력과 공정보도 의지'

### 불공정보도, 인사 전횡으로 파업촉발에 직접적 책임 있는 경우 부적격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차기 사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경영능력과 소통능력, 공정보도 실행 의지를 꼽았다.

불공정보도와 인사 전횡으로 파업 촉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치권에 줄을 댄 낙하산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조합원 376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경영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39.89%(150명)가 지속가능한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꼽았다.

이어 24.47%인 92명은 사내 구성원과 소통능력을, 23.94%인 90명은 편집권 독립 보장을 통한 공정보도 실행의지를 각각 꼽았다.

연합뉴스 노조에는 전 사원 806명 중 70%인 564

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에는 이들 중 3분의 2인 376명이 참여했다.

차기 경영진으로서 가장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로는 가장 많은 50%(188명)가 불공정 보도와 인사 전횡으로 파업 촉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를 꼽았다.

이어 22.87%인 86명은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10.9%인 41명은 정치권에 줄을 댄 낙하산 인사인 경우, 8.78%인 33명은 소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가장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4일까지 연합뉴스 차기 사장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5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의 서류심사를 거쳐 2~3명의 예비후보를 정한 뒤 10일 진흥회 이사회에서 이들 예비후보에 대한 면

접 끝에 차기사장을 확정한다.

노조는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노사화합을 저해하고 사내 갈등을 조장할 부적격 인사들이 선임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사장 선출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진흥회가 밀실에서 낙점된 부적격 인사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경우 노조는 이들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 첫 걸음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월5일 진흥회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 태영빌딩 앞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선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

## 뉴스통신진흥회는 노사화합 등 경영능력 제대로 따져야

### 연합뉴스 사장 추천위→진흥회 이사회→주주총회 거쳐 선임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차기 사장을 뽑을 때 노사화합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76명 중 43.88%인 165명은 차기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심사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사화합 · 위기관리 ·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이어 29.26%인 110명은 뉴미디어 시대 뉴스통신사의 역할과 비전 제시, 9.84%인 37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공익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9.31%인 35명은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 의지와 능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연합뉴스의 지분 30.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차기 경영진 추천권한을 갖고 있다.

진흥회는 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사장 후보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득표순으로 복수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

세부심사기준은 경영과 언론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조직 경영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나갈 수 있는 소양 등이다.

예비후보자가 선정되면 진흥회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 1명을 확정하며, 최종후보는 오는 25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장으로 선임된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청와대가 2명,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1명, 신문방송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해 구성됐다. 사추위는 진흥회 추천 3명, 진흥회 · 연합뉴스 협의추천 1명, 연합뉴스 노조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

#### 연합뉴스 사장 선임 향후 투쟁일정

3/4 (수)

사장 공모 접수 마감

3/5 (목)

사장추천위원회 복수예비후보 추천 10시-12시30분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선출을 위한 결의대회' /진흥회(마포 태영빌딩) 앞 9-12시

3/10 (화)

진흥회 사장 예비후보자 면접 및 최종 추천자 확정

'연합뉴스 미래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 /진흥회 9-12시

3/11 (수)

집행부 확대회의 : 최종 추천자 선발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3/12~24

대의원대회→조합원 대토론회→조합원 총회 등으로 투쟁방향 결정

3/25 (수)

연합뉴스 주주총회,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진 추진

# “뉴미디어 시대…조직·비전 재정비해야”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성 강화 시급” 차기 경영진 최대 과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조직과 비전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진행한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한 전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6명 중 36.17%인 136명은 차기 경영진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로 뉴미디어 시대 도래에 따른 조직·비전 재정

비를 꼽았다.

이어 26.6%인 100명은 정부와 구독료 재협상 등에 대비한 공격기능 강화를, 23.14%인 87명은 경쟁사와의 경쟁격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선택했다.

대내외 도전에 대응해 차기 경영진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38.03%인 143명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성 강화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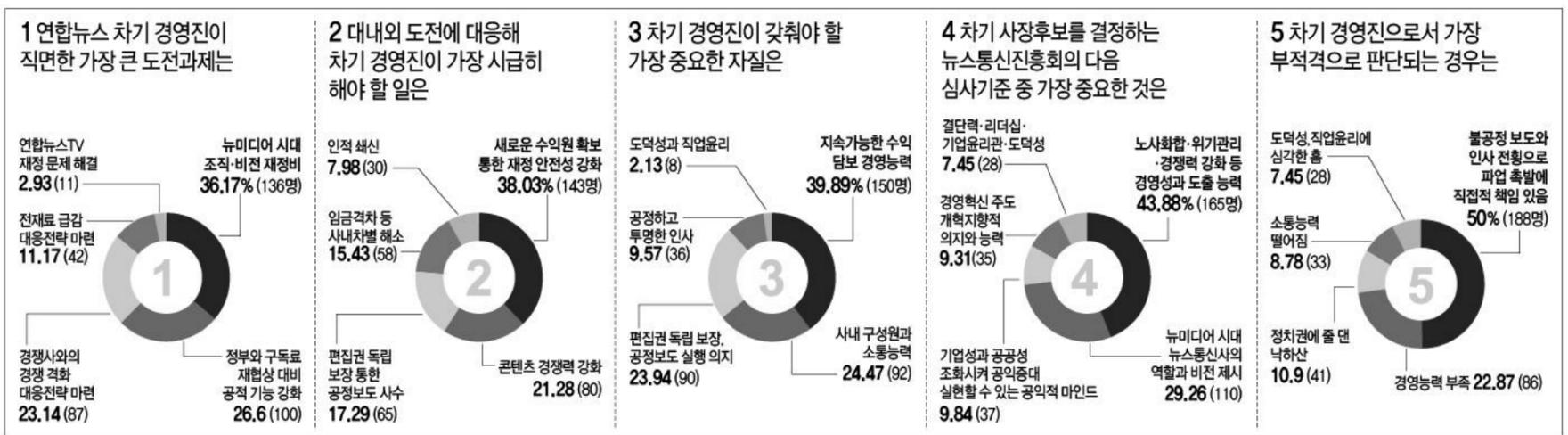
재정안정성 강화는 2013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차기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4위였다가 올해 1위로 뛰어오르면서 경쟁격화와 전채료 급감에 따른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어 21.28%인 80명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17.29%인 65명은 편집권 독립 보장을 통한 공정정보 사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골랐다.

15.43%인 58명은 임금격차 등 사내차별 해소가, 7.98%인 30명은 인적쇄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봤다.■

## 연합뉴스의 미래 … 조합원들의 생각은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옥상옥’ 의사결정구조 바꿔야

연합뉴스의 대표이사 사장은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다른 여타 주식회사들과 달리 연합뉴스는 이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거쳐 사장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사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전통은 지난 2003년 시작된 것으로 10년도 더 된 전통이다. 역사적으로는 2005년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보다도 앞선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통신진흥회도 정관 14조 4항에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둔 상태다.

사추위는 연합뉴스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도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전통이다. 연합뉴스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를 부여한 뉴스통신진흥법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제정됐다.

2003년 당시 16대 노조 집행부는 ‘밀실·정실·낙하산인사가 언론사의 혼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추위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각계 시민단체와 언론노조가 호응했으며 각 언론사 노조와 KBS 등 주주들도 이를 지지했다. 당시 사추위는 대주주였던 KBS·MBC 각 1명과 언론학계 1명, 언론인단체 1명, 시민사회단체

2명, 연합뉴스 사원대표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의 사추위는 당시와는 사뭇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위원 5명 가운데 노조 추천 외부인사 1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3명이 들어오는 데다 나머지 1명도 진흥회와 연합뉴스와 협의해 추천한다.

결국 최종 결정권이 있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추위까지 완전히 장악한, 일종의 ‘옥상옥’ 모양새다. 이런 사추위 구성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정보도를 망가뜨릴 밀실·정실·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진흥회 이사진 대다수를 정치권,

그 중에서도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를 타개하려면 뉴스통신진흥회의 사추위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애초의 취지를 살린, 명실상부한 사장추천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